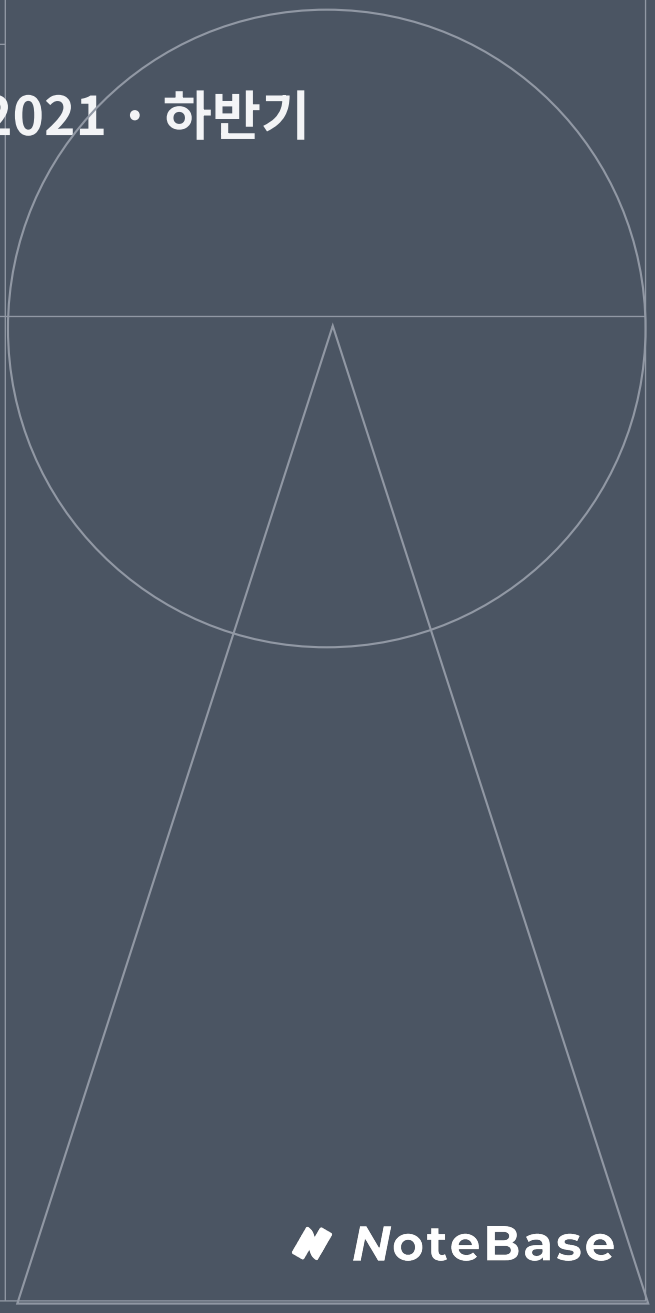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해경/순경 · 사회 · 2021 · 하반기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해경/순경 · 사회 · 2021 · 하반기

공무원/해경/순경 · 사회 · 2021 · 하반기

문 1. 다음 <보기> 중 최근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보기>
㉠ 법정형이 사형·무기 징역 또는 무기 금고에 해당하는 대상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 형사 사건 및 민사 사건의 합의부 관할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된다.
㉢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으나, 변호사나 경찰관은 배심원이 될 수 없다.
㉣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성폭력 범죄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더라도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할 수 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 배심원의 수와 자격, 평결의 효력 및 배제결정 사유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이다.
기속력은 법원이 반드시 그 판단에 따라야 하는 효력을 뜻한다.

NoteBase

핵심 구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은 일정한 형사사건이며 민사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가 법정형인 대상사건에는 원칙적으로 배심원 9인이 참여하고, 그 밖의 대상사건에는 7인이 참여한다.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되지만 변호사와 경찰공무원 등은 직업상 제외된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 또한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

보기 판단

㉠ X —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가 법정형인 대상사건에는 원칙적으로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틀린 표현: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올바른 표현: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 X — 국민참여재판은 일정한 합의부 관할 형사사건 등을 대상으로 하며 민사사건은 대상이 아니다.
틀린 표현: 형사 사건 및 민사 사건의 합의부 관할 사건
올바른 표현: 법률이 정한 합의부 관할 형사사건 등

㉢ X —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된다. 변호사와 경찰공무원이 배심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부분은 맞지만, 만 19세라는 연령 기준이 틀렸다.
틀린 표현: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올바른 표현: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 O —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므로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 O —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옳은 것은 ㉣과 ㉤의 2개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옳은 보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과 ㉤의 2개가 옳다.
틀린 표현: 없음
올바른 표현: 2개

② X — 옳은 보기는 1개가 아니라 ㉣과 ㉤의 2개이다.
틀린 표현: 1개
올바른 표현: 2개

③ O — ㉣과 ㉤이 옳으므로 옳은 보기는 모두 2개이다.

④ X — 옳은 보기는 3개가 아니라 ㉣과 ㉤의 2개이다.
틀린 표현: 3개
올바른 표현: 2개

오답 포인트

㉠의 중한 법정형 사건에서 7인과 9인을 바꾸어 제시한 점, ㉡에서 형사사건의 제도에 민사사건을 끼워 넣은 점, ㉢에서 직업상 제외사유는 맞게 두고 연령만 만 19세로 바꾼 점이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민참여재판 문항에서는 대상이 형사사건인지, 중한 법정형 사건의 배심원이 9인인지, 자격 연령이 만 20세인지, 평결이 비기속적인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의사가 배제결정 사유가 될 수 있는지를 차례로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중형 사건 9인, 배심원 만 20세, 평결은 비기속,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반대는 배제결정 사유이다.

NoteBase

문 2. 다음 갑국의 국회 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총 의석수는 300석으로 지역구는 254개 선거구에서 254석, 비례 대표는 46석이다.)

(단위: %)

정당	지역구 선거		비례 대표 선거		총 의석률
	득표율	의석률	득표율	의석률	
A	43.3	51.6	42.8	45.7	50.7
B	37.9	42.9	36.5	39.1	42.3
C	6.0	2.8	10.3	10.9	4.0
D	2.2	1.6	3.2	4.3	2.0
무소속	9.4	1.2	0	0	1.0

① 비례 대표 선거에는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가 채택되었을 것이다.

② 지역구 선거에는 다수 대표제가 적용되었을 것이다.

③ 지역구 선거에서 A당과 B당 후보자를 선택한 유권자의 표 중 사표는 없었을 것이다.

④ 지역구 선거에서 C당과 D당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의 의사가 과소 대표되었을 것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지역구 선거와 비례 대표 선거의 득표율·의석률을 비교하여 선거 제도와 표의 대표성을 추론하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지역구가 254개 선거구·254석이므로 한 선거구에서 1명을 선출하는 구조임을 확인한다.
2. 지역구 선거에서는 각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을 비교한다.
3. 비례 대표 선거에서는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률이 비슷한지 확인한다.
4. 득표율보다 의석률이 낮으면 과소 대표, 높으면 과대 대표로 판단한다.

NoteBase

핵심 근거

비례 대표 선거의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률은 A당 42.8%·45.7%, B당 36.5%·39.1%, C당 10.3%·10.9%, D당 3.2%·4.3%로 대체로 비슷하다. 반면 지역구 선거에서는 A당과 B당의 의석률이 득표율보다 높고, C당과 D당의 의석률은 득표율보다 낮다. 이는 지역구의 다수 대표제가 큰 정당에 유리하고 작은 정당의 표를 과소 대표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선지별 해설

① O — 비례 대표 선거에서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률이 대체로 비례하고, 유권자가 정당에 투표한 득표율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가 채택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② O — 254개 지역구에서 254명을 선출하므로 각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자 1명을 당선시키는 다수 대표제가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X — A당과 B당이 많은 지역구 의석을 얻었더라도 두 당 후보가 모든 지역구에서 당선된 것은 아니다. 낙선한 A당·B당 후보에게 투표한 표는 사표가 될 수 있으므로, '사표는 없었을 것이다'라는 표현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A당과 B당 후보자를 선택한 표 중에도 낙선 후보에게 투표한 사표가 있었을 수 있다'이다.
④ O — 지역구 선거에서 C당은 득표율 6.0%보다 의석률 2.8%가 낮고, D당도 득표율 2.2%보다 의석률 1.6%가 낮다. 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의사가 의석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과소 대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포인트

A당과 B당의 의석률이 높다는 사실을 두 정당에 투표한 모든 표가 의석으로 연결되었다는 뜻으로 오해하기 쉽다. 정당 전체의 의석 획득과 개별 지역구에서 낙선 후보에게 던진 표의 사표 여부는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득표율과 의석률을 정당별로 비교한다. 의석률이 득표율보다 낮으면 과소 대표, 높으면 과대 대표이다. 지역구 다수 대표제에서는 당선자 외 후보에게 투표한 표가 사표가 될 수 있으므로, 특정 정당이 많은 의석을 얻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정당 표에 사표가 없다고 판단할 수 없다.

암기 포인트

다수 대표제는 사표 발생과 소수 정당의 과소 대표 가능성이 크고, 비례 대표제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의 비례성을 높인다.

NoteBase

문 3. 다음 <보기>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보기>
㉠ 당해 사건의 당사자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고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당해 사건의 법원이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하려면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 당해 사건의 법원이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위헌법률심판의 제청 주체와 당사자의 불복 절차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법원이 직권으로 제청할 수 있는지, 제청신청이 기각된 당사자가 어떤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절차이다. 당사자가 법원에 제청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직접 청구하는 것은 아니다.

NoteBase

핵심 구분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담당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제청에 관한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의 제청신청이 기각되면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X: 당사자는 먼저 담당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해야 하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
㉡ O: 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X: 담당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제청할 수 있다.
㉣ X: 제청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 ㉢, ㉣의 3개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옳지 않은 설명은 1개가 아니라 ㉠, ㉢, ㉣의 3개이다.
틀린 표현: 1개
올바른 표현: 3개

② X
㉡만 옳고 ㉠, ㉢, ㉣이 옳지 않으므로 2개가 아니다.
틀린 표현: 2개
올바른 표현: 3개

③ O
㉠은 직접 청구 부분, ㉢은 당사자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 ㉣은 항고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각각 틀리므로 옳지 않은 설명은 모두 3개이다.

④ X
㉡은 제청신청이 기각된 당사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옳은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설명은 4개가 아니다.
틀린 표현: 4개
올바른 표현: 3개

NoteBase

오답 포인트

㉠의 '헌법재판소에 직접 위헌법률심판을 청구'와 ㉡의 '제청신청 기각 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를 같은 절차로 혼동하기 쉽다. 또한 ㉢의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표현은 법원의 직권 제청을 빠뜨렸고, ㉣은 항고가 금지된다는 원칙을 반대로 서술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당사자는 법원에 제청을 신청하고,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제청한다. 신청이 기각되면 항고가 아니라 헌법소원심판으로 다툰다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당사자는 법원에 신청, 법원은 직권도 가능, 기각되면 항고 없이 헌법소원이다.

NoteBase

문 4. (가) ~ (다)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이다. 다음 <보기> 중 옳은 설명은 모두 몇 개인가?

헌법의 기본원리	관련 헌법 내용
(가)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다)	……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보기>

㉠ (가)의 실현을 위해 정당 설립의 자유 및 복수 정당제가 인정된다.

㉡ (나)의 실현을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재외국민에게 대통령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다.

㉢ (다)의 실현을 위해 일체의 대외적 전쟁은 허용되지 않는다.

㉣ (가)의 실현을 위해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헌법 전문과 조문에 나타난 자유민주주의, 국민주권주의, 국제평화주의의 의미와 구현 제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NoteBase

용어 풀이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면서 민주적 절차와 권력분립에 따라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원리이다.
국민주권주의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가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원리이다.
국제평화주의는 국제평화를 지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원리이다.

핵심 구분

(가)는 자유민주주의, (나)는 국민주권주의, (다)는 국제평화주의이다.
㉠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는 다양한 정치적 의사의 형성을 보장하므로 자유민주주의의 구현 수단이다.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재외국민에게 대통령 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므로 국민주권주의의 구현에 해당한다.
㉢ 헌법이 부인하는 것은 모든 대외적 전쟁이 아니라 침략적 전쟁이다. 따라서 방어전쟁까지 일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 사법권의 독립은 법원이 다른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재판하도록 하여 권력분립과 국민의 자유·권리를 보장하므로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한다.
따라서 옳은 것은 ㉠, ㉡, ㉣의 3개이다. 현행 헌법 제1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03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현행 재외선거 제도가 이를 뒷받침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옳은 설명은 1개가 아니라 ㉠, ㉡, ㉣의 3개이다.
틀린 표현: 1개
올바른 표현: 3개

② X
㉢만 틀리고 나머지 3개가 옳으므로 옳은 설명은 2개가 아니다.
틀린 표현: 2개
올바른 표현: 3개

③ O
㉠, ㉡, ㉣이 옳고 ㉢이 틀리므로 옳은 설명은 모두 3개이다.

④ X
㉢의 ‘일체의 대외적 전쟁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표현이 틀리므로 4개 모두 옳지 않다.
틀린 표현: 4개
올바른 표현: 3개

NoteBase

오답 포인트

㉢의 '일체의 대외적 전쟁'이 함정이다. 헌법은 국제평화를 지향하지만 모든 전쟁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침략적 전쟁만 부인한다. 또한 ㉣의 사법권 독립은 단순한 법원 운영 원칙이 아니라 권력분립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장치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헌법 문구를 기본 원리와 연결한 뒤 각 제도가 그 원리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판단한다. 전쟁 관련 선지에서는 '모든 전쟁'과 '침략적 전쟁'을 반드시 구별하고, 개수형 문항은 각 진술의 O/X를 확정한 뒤 마지막에 합계한다.

암기 포인트

정당·권력분립은 자유민주주의, 선거는 국민주권, 침략전쟁 부인은 국제평화주의이다.

NoteBase

문 5. 다음 <보기>에 제시된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직업 선택의 자유
㉡ 교육을 받을 권리
㉢ 재판 청구권

① ㉠은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실현되는 권리, 즉 국가에 의한 자유를 말한다.

② ㉡은 20세기 이후 등장한 현대적 권리로 종류로는 환경권, 근로 3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이 있다.

③ ㉢은 국가에 특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권리로 국가의 의사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국가 기관을 구성함으로써 권리를 실현한다.

④ ㉠~㉢은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없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직업 선택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재판 청구권이 각각 자유권·사회권·청구권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와 기본권 제한의 일반 원칙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자유권은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받는 권리이다. 사회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급부와 배려를 요구하는 권리이다. 청구권은 기본권을 보장하거나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국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이다.

핵심 구분

직업 선택의 자유는 자유권, 교육을 받을 권리는 사회권, 재판 청구권은 청구권에 해당한다.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거나 국가 기관을 구성하는 권리이므로 청구권과 구별된다. 현행 대한민국헌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15조,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27조,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31조에서 보장한다. 또한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직업 선택의 자유는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권이며,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실현되는 사회권이 아니다.
틀린 표현: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실현되는 권리, 즉 국가에 의한 자유'
올바른 표현: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여 보장되는 자유권, 즉 국가로부터의 자유'이다.

② O
㉡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사회권이다. 사회권은 20세기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한 현대적 기본권이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와 근로 3권, 환경권 등이 이에 속한다.

③ X
㉢ 재판 청구권은 국가에 재판이라는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청구권이다. 국가의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국가 기관을 구성하는 권리는 참정권이다.
틀린 표현: '국가의 의사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국가 기관을 구성함으로써 권리를 실현한다'
올바른 표현: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여 권리를 구제받는 방식으로 실현한다'이다.

④ X
㉠~㉢을 포함한 기본권도 헌법이 정한 요건 아래 법률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다'는 단정이 틀리다.
틀린 표현: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없다'
올바른 표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이다.

오답 포인트

①은 사회권의 특징인 '국가에 의한 자유'를 자유권에 붙였고, ③은 청구권의 앞부분인 '국가에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권리' 뒤에 참정권의 실현 방식을 붙였다. ④는 기본권 보장과 기본권의 절대적 무제한을 혼동하게 만든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본권의 실현 방식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국가의 간섭 배제는 자유권, 국가의 급부·배려 요구는 사회권, 재판·청원 등 구제 행위 요구는 청구권, 선거·공무담임 등 국가 의사 형성 참여는 참정권이다. 기본권 제한 선지는 법률에 의한 제한 가능성과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를 함께 확인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직업은 자유권, 교육은 사회권, 재판은 청구권이다. 참여·기관 구성은 참정권이고, 기본권은 법률로 제한할 수 있어도 본질은 침해할 수 없다.

NoteBase

문 6. ㉠과 ㉡은 국가 성립 과정에 대한 이론의 일부이다. 다음 중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인간의 자연 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였다. 따라서 개인은 안전과 질서를 보장받기 위해 모든 권리를 국가에 양도하였다.
㉡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질서 있고 평화로운 상태였다. 그러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재산에 관한 권리를 더욱 확고하게 보장받기 위해 국가를 구성하였다.

① ㉠은 루소가, ㉡은 홉스가 주장한 사회 계약설이다.
② ㉠은 시민 혁명의 정당성을 부여한 이론이다.
③ ㉡의 관점은 인간은 본래 악한 존재라고 보고 있다.
④ ㉡은 ㉠보다 민주주의 국가에 부합하는 이론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자연 상태와 국가 성립 목적에 관한 서술을 통해 홉스와 로크의 사회계약론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홉스: 자연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보고, 안전과 질서를 위해 개인이 권리를 주권자에게 양도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은 홉스의 견해이다.
로크: 자연 상태에서도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지만 자연권 보장이 불안정하므로, 생명·자유·재산을 더욱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 정부를 구성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은 로크의 견해이다.
루소: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자유롭고 평등하지만 사유재산과 불평등이 발생하므로, 일반 의지에 기초한 사회계약을 통해 공동체를 구성한다고 보았다.

선지별 해설

① X — ㉠과 ㉡의 사상가를 잘못 연결하였다. ㉠의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과 권리 양도는 홉스, ㉡의 생명·자유·재산 보호는 로크의 주장이다. 올바르게는 '㉠은 홉스가, ㉡은 로크가 주장한 사회계약설이다.'이다.
② X — ㉠의 홉스는 강력한 주권과 절대적 통치를 정당화하였으므로 시민 혁명의 정당성을 부여한 이론으로 보기 어렵다. 올바르게는 저항권과 국민의 동의를 강조한 로크의 사회계약론이 시민 혁명의 정당화에 기여하였다고 해야 한다.
③ X — ㉡은 로크의 관점이며, 로크는 자연 상태의 인간을 본래 악한 존재로 보지 않았다. 올바르게는 인간의 자연 상태를 투쟁 상태로 본 ㉠의 홉스가 인간의 이기적 성향을 강조하였다고 해야 한다.
④ O — ㉡의 로크는 자연권, 국민의 동의, 저항권과 제한 정부를 강조하였다. 강력한 주권자에게 권리를 양도한다고 본 ㉠의 홉스보다 민주주의 국가의 원리에 더 부합한다.

NoteBase

출제자가 노린 함정

㉠의 '모든 권리의 양도'만 보고 사회계약론 전체를 시민 혁명과 연결하거나, ㉡의 자연 상태를 인간을 이기적 존재로 본 홉스의 관점과 혼동하게 한 점이 함정이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은 홉스, '생명·자유·재산의 보호'는 로크의 대표 표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연 상태의 표현과 국가를 만드는 목적을 먼저 확인한다. 투쟁 상태·권리 양도·강력한 주권은 홉스, 생명·자유·재산·정부의 신탁·저항권은 로크, 일반 의지·직접 민주정은 루소로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홉스는 투쟁과 권리 양도, 로크는 자연권 보호와 저항권, 루소는 일반 의지이다.

NoteBase

문 7. 다음 사례에서 갑의 재산에 대한 상속인과 상속액으로 가장 옳은 것은?

<사례>
갑은 아내 A, 딸 B, 노모(老母) C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유언 없이 재산 14억 원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① A: 7억 원, B: 7억 원

② A: 7억 원, B: 5억 원, C: 2억 원

③ A: 8.4억 원, B: 5.6억 원

④ A: 8.4억 원, C: 5.6억 원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함께 있을 때 법정상속인의 순위와 법정상속분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딸인 직계비속이 노모인 직계존속보다 선순위이고,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점이다.

용어 풀이

직계비속은 자녀·손자녀처럼 본인에게서 아래 세대로 이어지는 혈족이고, 직계존속은 부모·조부모처럼 위 세대로 이어지는 혈족이다. 법정상속분은 유언으로 상속분을 정하지 않았을 때 민법에 따라 정해지는 상속 비율이다.

핵심 구분

민법 제1000조에 따르면 직계비속은 직계존속보다 선순위이므로 딸 B가 있는 이 사례에서 노모 C는 상속인이 아니다. 민법 제1003조에 따라 배우자 A는 직계비속 B와 공동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배우자의 상속분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보다 50%가 가산되므로 A와 B의 비율은 1.5 : 1이다. 따라서 A는 14억 원× 1.5/2.5=8.4억 원, B는 14억 원× 1/2.5=5.6억 원을 상속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A와 B가 공동상속인이라는 점은 맞지만, 배우자 A의 상속분에는 50%가 가산되므로 균등하게 7억 원씩 상속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A 7억 원, B 7억 원
올바른 표현: A 8.4억 원, B 5.6억 원

② X
직계비속 B가 직계존속 C보다 선순위이므로 C는 상속인이 아니다. 또한 A와 B의 상속분은 1.5 대 1이다.
틀린 표현: A 7억 원, B 5억 원, C 2억 원
올바른 표현: A 8.4억 원, B 5.6억 원이며 C는 상속하지 않는다.

③ O
배우자 A와 직계비속 B가 공동상속인이 되고, 1.5 대 1의 비율로 14억 원을 나누면 A는 8.4억 원, B는 5.6억 원을 상속한다.

④ X
C가 아니라 선순위 직계비속인 B가 배우자 A와 공동상속인이 된다.
틀린 표현: A 8.4억 원, C 5.6억 원
올바른 표현: A 8.4억 원, B 5.6억 원

오답 포인트

①처럼 배우자와 자녀가 균등하게 나눈다고 보거나, ②·④처럼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상속한다고 보는 것이 함정이다. 직계비속이 있으면 직계존속은 후순위로 밀리고, 배우자는 직계비속의 몫보다 50% 많은 비율로 상속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의 순서로 가장 앞선 혈족을 정한다. 그다음 배우자를 공동상속인에 포함하고, 배우자의 몫을 함께 상속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 1명의 몫의 1.5배로 계산한다.

암기 포인트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상속하고, 배우자는 자녀 1명의 1.5배를 상속한다.

NoteBase

문 8. 다음은 교통 연구자의 연구 보고서이다. <보기>에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가설 설정>
운전자 안전 교육이 운전 능력 향상과 운전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쳐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것이다.

<(가)>
· 운전자 안전 교육은 5개월 동안 운전에 대한 지식, 기능의 향상과 태도의 변화에 관한 것이다.
· 교통질서 의식 향상은 최근 1년 간 교통 위반이나 사고 건수를 말한다.

<연구과정>
A 집단과 B 집단을 나눈 뒤 A 집단에게만 5개월 동안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두 집단의 1년 간 교통 위반 건수를 조사함.

<(나)>
A 집단의 교통 법규 위반 건수가 B 집단보다 적어, 안전 교육이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됨.

<보기>
㉠ 운전자 안전 교육은 외생 변인, 운전 능력 향상과 운전 태도는 독립 변인, 교통사고 감소는 종속 변인이다.
㉡ (가)는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에 대한 개념적 정의에 해당된다.
㉢ A 집단은 실험 집단, B 집단은 통제 집단에 해당되며 실험 처치 전과 후에 검사를 실시했다.
㉣ (나)는 다른 연구 방법에 비해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쉽지만, 결과를 현실 세계에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① ㉠
② ㉣
③ ㉡, ㉢
④ ㉢, ㉣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실험 연구에서 독립 변인·종속 변인, 조작적 정의, 실험 집단·통제 집단, 사전·사후 검사의 의미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독립 변인은 연구자가 원인으로 보고 조작하는 변인이고, 종속 변인은 그 영향으로 나타나는 결과 변인이다.
조작적 정의는 추상적 개념을 실제로 관찰하거나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 절차와 지표로 바꾸는 것이다.
실험 집단은 처치를 받는 집단이고 통제 집단은 처치를 받지 않는 비교 집단이다. 사전 검사는 처치 전에, 사후 검사는 처치 후에 실시한다.
실험 연구는 변인을 통제하고 처치를 가하므로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쉽지만,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의 결과를 현실에 그대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선지별 해설

① X — ㉠은 틀리다. 운전자 안전 교육은 외생 변인이 아니라 연구자가 조작한 독립 변인이고, 운전 능력 향상·운전 태도 변화와 교통사고 감소는 교육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결과이므로 종속 변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안전 교육은 독립 변인, 교육 효과로 나타나는 변화는 종속 변인'으로 고쳐야 한다.
② O — ㉣만 옳다. 제시된 연구는 교육 실시 여부를 달리한 실험 연구이므로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쉽지만, 통제된 연구 결과를 현실 세계 전체에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③ X — ㉡과 ㉢이 모두 틀리다. ㉡의 (가)는 추상적 변인을 구체적인 교육 기간과 교통 위반·사고 건수로 측정 가능하게 만든 조작적 정의이지 개념적 정의가 아니다. ㉢에서 A 집단은 실험 집단, B 집단은 통제 집단이라는 부분은 맞지만, 연구과정에는 처치 후 조사만 제시되어 있어 '처치 전과 후에 검사를 실시했다'는 부분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사후 검사만 실시한 설계이다.
④ X — ㉣은 옳지만 ㉢이 틀리므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선택지가 아니다. ㉢은 'A는 실험 집단, B는 통제 집단이며 처치 후에만 조사했다'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에서는 '교육'을 연구 외부의 영향인 외생 변인으로 착각하기 쉽고, ㉡에서는 측정 방법을 제시한 조작적 정의를 개념적 정의로 혼동하기 쉽다. 또한 ㉢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구분이 맞더라도 사전 검사까지 실시했다는 근거는 없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다르게 적용한 것은 독립 변인, 그 결과로 측정한 것은 종속 변인으로 판단한다. 추상적 개념을 기간·횟수·점수 등으로 측정 가능하게 만들면 조작적 정의이고, 연구 절차에 처치 전 측정이 명시되어 있을 때만 사전 검사가 있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원인으로 조작하면 독립 변인, 결과로 측정하면 종속 변인이다. 측정 가능한 지표는 조작적 정의이고, 실험은 인과관계 파악에는 강하지만 일반화에는 약하다.

NoteBase

문 9. 다음 <보기>에서 강조하는 사회 과학적 연구 경향에 부합하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사회 현상의 원인과 영향을 분과 학문의 관점에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것 못지않게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얻어진 지식을 통합하여 총체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중시해야 한다.

① 각각의 학문에 적합한 특정한 연구 대상이 존재한다.
② 학문의 경계를 넘어서는 종합적 연구가 필요하다.
③ 자연 과학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을 통합해야 한다.
④ 학문들은 각각 고유한 연구방법을 가지고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제시문이 강조하는 학제 간·통합적 연구의 의미를 분과 학문 중심의 연구와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학제 간·통합적 연구는 하나의 사회 현상을 여러 학문의 관점과 지식을 결합하여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연구 경향이다. 분과 학문적 연구는 각 학문이 구분된 연구 대상과 방법을 바탕으로 현상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둔다. 제시문은 분과 학문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과를 학문의 경계를 넘어 종합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각각의 학문에 적합한 특정한 연구 대상이 존재한다'는 진술은 학문별 연구 영역의 구분을 강조하므로 제시문의 통합적 연구 경향에 부합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여러 학문의 관점과 지식을 함께 활용하여 사회 현상을 총체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② O
'학문의 경계를 넘어서는 종합적 연구'는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얻은 지식을 통합해야 한다는 제시문의 핵심과 정확히 일치한다.

③ X
'자연 과학을 중심으로'라는 표현이 틀렸다. 제시문은 특정 학문을 중심에 두어 다른 학문을 종속시키는 연구가 아니라, 다양한 학문적 관점과 지식을 종합하는 연구를 강조한다.

④ X
'각각 고유한 연구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진술은 학문별 독자성과 경계를 강조하므로 제시문의 연구 경향을 나타내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서로 다른 학문의 연구 방법과 성과를 연계하여 사회 현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제시문에 '분과 학문의 관점에서 전문적으로 연구'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강조점은 그 뒤의 '다양한 학문적 관점', '지식의 통합', '총체적 이해'에 있다. ①과 ④는 분과 학문의 구분을, ③은 특정 학문 중심의 통합을 말하므로 제시문의 취지와 다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여러 관점·지식의 결합·총체적 이해'가 제시되면 학제 간·통합적 연구로 판단한다. '학문별 고유 대상·고유 방법·특정 학문 중심'이 강조되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통합적 연구는 학문의 경계를 넘어 여러 관점과 지식을 결합하는 연구이다.

NoteBase

문 10. 밑줄 친 (가)~(라)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가) 외계 항성계와 행성을 탐험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최근 하와이에 있는 W.M. 켁 천문대(Keck Observatory)에서 관측된 자료를 근거로 두 개의 새로운 논문이 천문학 저널(Astronomical Journal)에 발표됐다. 이들 논문은 주항성에 가깝게 있는 (나) 갈색왜성과 행성계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다) 갈색왜성은 행성보다는 큰데 항성보다는 질량이 작고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내지 못하는 천체이다. 온도가 대단히 낮고 크기가 작기 때문에 직접 관측 되지 않았다. 하지만 켁 천문대에 설치한 '보텍스 코로나그래프(Vortex Coronagraph)'를 통해 갈색왜성을 찍는 데 성공했다. 코로나그래프는 개기일식이 아닌 평상시에 태양의 빛을 가려 코로나 방출을 파악하는 장비인데, 이를 (라) 켁 천문대에 설치해 외계행성을 찾는 데 응용한 것이다.

<보기>

㉠ (가)와 같은 현상은 특수성을 지닌다.

㉡ (나)와 같은 현상은 (가)와 같은 현상과 다르게 개연성을 갖는다.

㉢ (다)와 같은 현상은 (라)와 같은 현상과 다르게 확실성의 원리를 따른다.

㉣ (다)와 같은 현상은 당위 법칙, (라)와 같은 현상은 존재 법칙이 적용된다.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자연 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을 구분하고, 각각에 적용되는 법칙과 일반적 특징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자연 현상은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현상으로, 존재 법칙이 적용되며 인과 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필연성과 확실성이 강하다.

사회·문화 현상은 인간의 의지와 가치 판단이 개입하는 현상으로, 당위 법칙이 적용되며 개연성과 확률성, 시대와 사회에 따른 특수성을 지닌다.

(가)의 새로운 탐험 방법이 열린 것과 (라)의 관측 장비 설치·응용은 인간의 의지와 목적이 개입한 사회·문화 현상이다. (나)의 갈색왜성과 행성계 시스템 및 (다)의 갈색왜성의 물리적 성질은 자연 현상이다.

따라서 ㉠과 ㉢은 옳고, ㉡과 ㉣은 옳지 않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은 옳지만 ㉡은 옳지 않다. (나)는 자연 현상이므로 개연성이 아니라 필연성과 확실성이 강하다. 올바른 조합은 ㉠, ㉢이다.
② O — (가)는 사회·문화 현상이어서 특수성을 지니므로 ㉠이 옳고, (다)는 자연 현상으로서 (라)의 사회·문화 현상과 달리 확실성의 원리를 따르므로 ㉢도 옳다.
③ X — ㉡과 ㉣이 모두 옳지 않다. ㉡의 '(나)는 개연성을 갖는다'는 '(나)는 필연성과 확실성이 강하다'로 고쳐야 한다. ㉣은 법칙을 반대로 연결했으므로 '(다)에는 존재 법칙, (라)에는 당위 법칙이 적용된다'로 고쳐야 한다. 올바른 조합은 ㉠, ㉢이다.
④ X — ㉢은 옳지만 ㉣은 옳지 않다. (다)는 자연 현상이므로 존재 법칙이, (라)는 사회·문화 현상이므로 당위 법칙이 적용된다. 올바른 조합은 ㉠, ㉢이다.

오답 포인트

㉡은 자연 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의 성격을 뒤바꾼 선지이다. 개연성은 사회·문화 현상에, 필연성과 확실성은 자연 현상에 대응한다. ㉣도 당위 법칙과 존재 법칙의 적용 대상을 서로 바꾸어 놓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인간의 의지·목적·가치가 개입했는지를 확인한다. 개입하면 사회·문화 현상으로 보아 당위 법칙, 개연성, 특수성을 연결하고, 개입하지 않은 자연의 물리적 현상이면 존재 법칙, 필연성, 확실성을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자연 현상은 존재·필연·확실, 사회·문화 현상은 당위·개연·특수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11. 다음 <보기>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내일이면 수능이다. 종례 시간에 ㉠내일 치르는 수능 시험 유의 사항을 알려주며 격려해 주시는 ㉡담임 선생님의 말씀에 눈물이 났다. ㉢고사장 확인까지 하니 이제야 실감이 났다. 이 시간이 지나면 이 친구들 모두 서로 다른 ㉣대학, ㉤직장에서 각자의 인생을 살게 되겠지. ㉥막냇동생은 응원 선물을 내밀었고, ㉦아버지는 말없이 안아 주셨다. 전국의 모든 ㉧수험생이여 힘내자!

① ㉠은 예기 사회화를 위한 담임 선생님의 역할 행동이다.

② ㉡, ㉧은 성취 지위이고 ㉥, ㉦은 귀속 지위이다.

③ ㉢은 수험생으로서 역할 행동이다.

④ ㉣은 공식적 사회화 기관, ㉤은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예기 사회화와 역할 행동, 귀속 지위와 성취 지위, 공식적 사회화 기관과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예기 사회화는 장차 갖게 될 지위나 집단의 역할에 필요한 지식·규범을 미리 학습하는 과정이다. 역할 행동은 개인이 차지한 지위에 기대되는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는 행동이다.
귀속 지위는 본인의 의지나 노력과 관계없이 선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주어지는 지위이고, 성취 지위는 본인의 의지와 노력으로 후천적으로 얻는 지위이다.
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사회화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고,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다른 목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기관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담임 선생님이 수능 시험 유의 사항을 알려 주는 것은 담임 교사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하는 행동이며, 학생들이 곧 수험생으로서 필요한 행동 규범을 미리 익히게 하므로 예기 사회화를 돕는다.
② X — 틀린 부분은 '㉡ 아버지는 귀속 지위이다'이다. 담임 선생님과 수험생은 후천적으로 얻는 성취 지위이고, 막냇동생은 출생 순서에 따라 주어지는 귀속 지위이다. 아버지는 자녀를 둠으로써 후천적으로 얻게 되는 성취 지위이므로, 올바르게는 '㉠, ㉢, ㉡은 성취 지위이고 ㉣은 귀속 지위이다'이다.
③ O — 고사장을 확인하는 것은 시험 응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기대되는 행동이므로 수험생으로서의 역할 행동이다.
④ O — 대학은 교육과 사회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직장은 생산·업무 수행이 주된 목적이고 그 과정에서 사회화가 이루어지므로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오답 포인트

②는 가족 안의 지위를 모두 귀속 지위로 묶게 만드는 함정이다. 막냇동생은 출생과 함께 주어지지만, 아버지는 자녀를 두면서 후천적으로 얻는 지위이므로 두 지위의 성격이 다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위는 '본인의 의지·노력과 관계없이 주어졌는가, 후천적으로 얻었는가'를 먼저 확인한다. 사회화 기관은 사회화가 그 기관의 주된 설립 목적인지를 기준으로 공식적 기관과 비공식적 기관을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막냇동생은 귀속 지위, 아버지는 성취 지위이다. 대학은 공식적 사회화 기관, 직장은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NoteBase

문 12. 사회 불평등에 대한 갈등론적 관점과 주어진 진술에 대한 응답이 모두 일치하는 사람은?
<※ 진술과 관점이 일치하면 ○, 일치하지 않으면 ×로 응답함>

진 술	갑	을	병	정
㉠ 사회 불평등은 사회적 대립 관계를 나타낸다.	○	○	×	○
㉡ 사회 계층화는 보편적이며 필수 불가결한 현상이다.	○	×	○	×
㉢ 차등적인 분배 체계는 경쟁을 유발하며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	○	×	×
㉣ 자원의 배분 과정에서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사회 불평등과 계층화를 보는 갈등론과 기능론의 관점을 구별하고, 각 진술에 대한 갈등론의 응답 배열을 찾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갈등론은 사회 불평등을 지배 집단이 희소가치를 독점하면서 나타나는 대립과 갈등의 결과로 보고, 불평등한 분배가 보편적이거나 필수 불가결하다고 보지 않는다.
기능론은 사회 계층화를 사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보편적 현상으로 보고, 차등 보상이 경쟁과 성취동기를 유발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고 본다.
따라서 갈등론의 응답은 ㄱ ○, ㄴ ×, ㄷ ×, ㄹ ○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갑 X
갑은 ㄱ·ㄴ·ㄷ·ㄹ에 차례로 ○, ○, ○, ×로 응답하였다. 갈등론은 ㄴ의 '사회 계층화는 보편적이며 필수 불가결하다'와 ㄷ의 '차등적인 분배 체계는 경쟁을 유발하며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에 동의하지 않고, ㄹ에는 동의한다. 올바른 응답은 ○, ×, ×, ○이다.

② 을 X
을은 ○, ×, ○, ○로 응답하였다. ㄷ을 ○로 판단한 부분이 틀렸다. 경쟁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차등 분배라는 설명은 기능론의 관점이며, 갈등론에서는 ㄷ에 ×로 응답해야 한다. 올바른 응답은 ○, ×, ×, ○이다.

③ 병 X
병은 ×, ○, ×, ○로 응답하였다. 갈등론은 사회 불평등이 사회적 대립 관계를 드러낸다는 ㄱ에 동의하고, 사회 계층화가 보편적이고 필수 불가결하다는 ㄴ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따라서 ㄱ은 ○, ㄴ은 ×로 고쳐야 하며, 올바른 응답은 ○, ×, ×, ○이다.

④ 정 O
정은 ○, ×, ×, ○로 응답하였다. 갈등론은 불평등을 집단 간 대립과 연결하고 자원 배분에서 기득권 집단의 이해관계를 중시하므로 ㄱ과 ㄹ은 ○이다. 반면 계층화의 보편성·필수성을 강조하는 ㄴ과 차등 분배의 사회 발전 기능을 강조하는 ㄷ은 기능론의 설명이므로 ×이다.

오답 포인트

ㄷ의 '경쟁을 유발하며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표현 때문에 갈등론도 경쟁을 중시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불평등한 차등 보상의 긍정적 기능을 강조하는 것은 기능론이며, 갈등론은 그 분배가 기득권 집단의 이익을 반영한다고 본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불평등의 필요성·보편성·사회 기여를 강조하면 기능론, 지배 집단의 기득권·희소가치 독점·집단 간 대립을 강조하면 갈등론으로 판단한다. 각 진술을 먼저 이 기준으로 O/X 판정한 뒤 사람별 응답 배열과 대조한다.

암기 포인트

기능론은 '필요한 차등 보상', 갈등론은 '기득권이 만든 불평등'이다.

NoteBase

문 13. 다음은 ㉠국과 ㉡국의 계층별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계층은 상, 중, 하만 존재한다.)

(단위:%)

㉠국			㉡국		
	1980년	2010년		1980년	2010년
상층	20	20	상층	20	30
하층	50	30	하층	30	50

① ㉠국은 안정적인 사회 계층 구조로 변하였다.

② ㉡국은 2010년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로 변하였다.

③ 2010년 ㉠국은 ㉡국에 비해 폐쇄적인 계층 구조를 갖고 있다.

④ ㉡국의 계층 구조 변화는 복지 제도 확충의 결과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표에 제시된 상층·하층 비율로 중층 비율을 구한 뒤, 각 시기의 계층 구조 유형을 판별하고 자료만으로 알 수 없는 내용은 구분하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단위가 비율(%)이고 상층·중층·하층의 합이 100%임을 확인한다.
2. 중층 비율을 100%에서 상층과 하층의 비율을 뺀 값으로 구한다.
3. 하층이 가장 많은 피라미드형, 중층이 가장 많은 다이아몬드형, 중층이 가장 적은 모래시계형을 구분한다.
4. 계층 이동의 개방성이나 변화의 원인처럼 표에 없는 정보는 추론하지 않는다.

핵심 근거

㉠국의 중층 비율은 1980년 30%, 2010년 50%이다. 따라서 ㉠국은 하층이 가장 많은 피라미드형에서 중층이 가장 많은 다이아몬드형으로 변하였다. ㉡국의 중층 비율은 1980년 50%, 2010년 20%이므로 2010년에는 중층이 가장 적은 모래시계형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국은 2010년에 상층 20%, 중층 50%, 하층 30%로 중층 비율이 가장 높은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되었다. 다이아몬드형은 중층이 두터워 안정적인 계층 구조로 본다.
② X — ㉡국의 2010년 비율은 상층 30%, 중층 20%, 하층 50%이므로 중층이 가장 적다. '피라미드형'이 틀린 표현이며, 올바르게는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로 변하였다고 해야 한다.
③ X — 2010년의 계층별 비율만으로는 계층 이동 가능성이나 계층 구조의 개방성·폐쇄성을 판단할 수 없다. '폐쇄적인 계층 구조를 갖고 있다'가 틀린 표현이며, 올바르게는 두 나라의 개방성 정도는 이 자료만으로 알 수 없다고 해야 한다.
④ X — 표는 ㉡국의 계층별 비율 변화만 보여 줄 뿐 그 변화의 원인을 제시하지 않는다. '복지 제도 확충의 결과이다'가 틀린 표현이며, 올바르게는 계층 구조 변화의 원인은 이 자료만으로 알 수 없다고 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표에 중층 비율이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특히 ㉡국의 2010년은 하층이 가장 많더라도 중층 20%가 상층 30%보다 작으므로 피라미드형이 아니라 모래시계형이다. 또한 계층별 구성 비율을 계층 이동의 개방성이나 복지 정책이라는 인과관계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빠진 계층의 비율을 100%에서 나머지 비율을 빼서 구한다. 그다음 세 계층의 상대적 크기로 구조 유형만 판별하고, 이동 가능성·정책 효과·변화 원인은 자료에 별도 근거가 있을 때만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중층이 두꺼우면 다이아몬드형, 중층이 얇으면 모래시계형이며, 구성 비율만으로 개방성이나 변화 원인은 알 수 없다.

NoteBase

문 14. 다음 <보기>에서 파악할 수 있는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가장 부합하는 진술은?

<보기>
자아와 자의식은 타인에 대한 우리의 행동, 타인의 반응, 그리고 그 반응에 대한 우리의 예상을 통해 만들어지고 계속해서 수정된다. 인간은 타인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하려고 한다. 인간은 단지 몸짓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몸짓과 그 몸짓을 유발하는 물체나 사건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반응한다.

① 사회 제도는 지배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
② 사회·문화 현상의 의미는 개인이 규정하기 나름이다.
③ 사회 불평등은 출신 배경과 같은 불합리한 요소에 의해 생산된다.
④ 사회 집단들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제시문에 나타난 상징적 상호 작용론을 기능론 및 갈등론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상징적 상호 작용론은 사람들이 상호 작용 과정에서 사물이나 행동에 주관적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면서 행동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개인의 자아와 사회·문화 현상의 의미도 타인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형성되고 수정된다고 본다.
기능론은 사회의 각 부분이 상호 의존하면서 사회 전체의 안정과 통합에 기여한다고 보고, 갈등론은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의 대립 및 불평등한 자원 배분에 주목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사회 제도는 지배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설명은 지배와 대립을 강조하는 갈등론에 해당한다. 올바르게는 상징적 상호 작용론은 사회 제도의 고정된 기능보다 행위자들이 상호 작용 속에서 부여하는 의미에 주목한다고 해야 한다.
② O — 사회·문화 현상의 의미가 행위자의 주관적 정의와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는 진술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에 부합한다. 제시문도 인간이 타인의 행동과 몸짓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 과정에서 자아를 형성·수정한다고 본다.
③ X — '사회 불평등은 출신 배경과 같은 불합리한 요소에 의해 생산된다'라는 설명은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비판하는 갈등론에 가깝다. 올바르게는 상징적 상호 작용론은 불평등 자체의 구조적 원인보다 일상적 상호 작용에서 지위와 차이가 어떤 의미로 규정되고 재생산되는지에 주목한다고 해야 한다.
④ X — '사회 집단들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설명은 사회 각 부분의 상호 의존과 통합을 강조하는 기능론에 해당한다. 올바르게는 상징적 상호 작용론은 개인들이 상징을 매개로 의미를 주고받는 미시적 상호 작용에 초점을 둔다고 해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제시문의 ‘타인의 반응’, ‘예상’, ‘몸짓의 의미’는 단순한 상호 의존이 아니라 의미를 해석하는 상호 작용을 가리킨다. 이를 ④의 기능론적 상호 의존과 혼동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의미·상징·해석·자아 형성·일상적 상호 작용이 중심이면 상징적 상호 작용론, 사회 안정·통합·상호 의존이면 기능론, 지배·대립·불평등이면 갈등론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상징적 상호 작용론은 ‘상징의 의미를 해석하는 개인’, 기능론은 ‘상호 의존과 통합’, 갈등론은 ‘지배와 불평등’이다.

NoteBase

문 15. 다음 ㉠~㉢에 들어갈 숫자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 경제 활동 참가율은 80%이고 고용률이 60%인 국가의 실업률은 (㉠)% 이다.
· 실업률이 2%이고 실업자가 300명일 때, 생산 가능 인구가 (㉡)명이면, 경제 활동 참가율은 (㉢)%가 된다.

① ㉠: 20, ㉡: 30,000, ㉢: 55
② ㉠: 20, ㉡: 25,000, ㉢: 60
③ ㉠: 25, ㉡: 30,000, ㉢: 55
④ ㉠: 25, ㉡: 25,000, ㉢: 6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경제 활동 참가율·고용률·실업률의 분모를 구분하고 노동시장 지표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첫째 조건에서는 경제 활동 참가율이 80%, 고용률이 60%이다. 둘째 조건에서는 실업률이 2%, 실업자 수가 300명이다.
경제 활동 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이며, 고용률과 경제 활동 참가율의 분모는 생산 가능 인구, 실업률의 분모는 경제 활동 인구이다.

사용할 공식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100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100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각 지표의 분모가 서로 다르므로 생산 가능 인구, 경제 활동 인구, 취업자, 실업자의 포함 관계를 이용한다.

계산 과정

1. 생산 가능 인구를 100명으로 두면 경제 활동 인구는 80명, 취업자는 60명이다. 실업자는 20명이므로 ㉠은 $\frac{20}{80} \times 100 = 25\%$이다.
2. 실업률이 2%이고 실업자가 300명이므로 경제 활동 인구는 $300 \div 0.02 = 15,000$명이다.
3. 경제 활동 참가율이 60%가 되려면 생산 가능 인구는 $15,000 \div 0.60 = 25,000$명이다. 따라서 ㉡은 25,000, ㉢은 60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의 20은 실업자 수를 생산 가능 인구와 비교한 비율일 뿐 실업률이 아니다. 또한 생산 가능 인구가 30,000명이면 경제 활동 참가율은 50%이므로 ㉢의 55도 맞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 25, ㉡: 25,000, ㉢: 60'이다.
② X — ㉡ 25,000과 ㉢ 60은 맞지만, 실업률의 분모는 생산 가능 인구가 아니라 경제 활동 인구이므로 ㉠은 20이 아니라 25이다. 올바르게는 '㉠: 25, ㉡: 25,000, ㉢: 60'이다.
③ X — ㉠ 25는 맞지만, 경제 활동 인구 15,000명과 생산 가능 인구 30,000명을 사용하면 참가율은 50%가 되어 ㉢ 55와도 맞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 25, ㉡: 25,000, ㉢: 60'이다.
④ O — ㉠ 25, ㉡ 25,000, ㉢ 60이 세 계산 결과와 모두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에서 실업자 20명을 생산 가능 인구 100명으로 나눈 20%를 실업률로 착각하기 쉽다. 실업률은 실업자를 경제 활동 인구 80명으로 나누므로 25%이다. 둘째 조건에서도 실업률로 먼저 경제 활동 인구를 구한 뒤 참가율을 이용해 생산 가능 인구를 역산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비율의 분모부터 표시한다. 고용률과 경제 활동 참가율은 생산 가능 인구가 분모이고, 실업률은 경제 활동 인구가 분모이다. 그다음 경제 활동 인구=취업자+실업자의 관계로 필요한 수치를 계산한다.

암기 포인트

참가율·고용률의 분모는 생산 가능 인구, 실업률의 분모는 경제 활동 인구이다.

NoteBase

문 16. 다음 표는 A~D재 가격이 각각 10% 인상되었을 때의 판매 수입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구분	A재	B재	C재	D재
판매 수입 변화율(%)	-10	0	5	10

① A재 수요는 가격에 대해 완전 탄력적이다.

② B재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 탄력적이다.

③ C재 가격상승률이 수요량 감소율보다 작다고 본다.

④ D재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가격이 상승할 때 판매수입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용하여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판별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모든 재화의 가격은 각각 10% 상승한다. 판매수입 변화율은 A재 -10%, B재 0%, C재 5%, D재 10%이다. 가격 상승 시 판매수입이 감소하면 탄력적, 불변이면 단위탄력적, 증가하면 비탄력적이다. 판매수입이 가격과 같은 비율로 증가하면 수요량은 변하지 않은 것이다.

사용할 공식

판매수입은 $R = P \times Q$이다. 따라서 $Q_1/Q_0 = (R_1/R_0)/(P_1/P_0)$로 가격 변화 뒤의 수요량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판매수입 변화가 가격 변화와 수요량 변화가 결합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가격이 10% 상승하므로 $P_1/P_0 = 1.10$이다. A재는 $Q_1/Q_0 = 0.90/1.10 \approx 0.818$이므로 수요량이 약 18.18% 감소한다. B재는 판매수입이 변하지 않아 가격 상승 효과와 수요량 감소 효과가 상쇄된다. C재는 $Q_1/Q_0 = 1.05/1.10 \approx 0.955$이므로 수요량 감소율은 약 4.55%로 가격상승률 10%보다 작다. D재는 $Q_1/Q_0 = 1.10/1.10 = 1$이므로 수요량이 변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A재는 가격이 상승하자 판매수입이 감소했으므로 수요가 탄력적이지만, 이를 완전 탄력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틀린 표현 '완전 탄력적'은 '탄력적'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 B재는 가격이 상승해도 판매수입이 변하지 않았으므로 총수입법상 단위탄력적이다. 틀린 표현 '탄력적'은 '단위탄력적'으로 고쳐야 한다.
③ X — C재는 가격이 10% 상승할 때 수요량이 약 4.55% 감소하므로 가격상승률이 수요량 감소율보다 크다. 틀린 표현 '작다'는 '크다'로 고쳐야 한다.
④ O — D재는 가격이 10% 상승하고 판매수입도 10% 증가하여 수요량이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표에 나타난 범위에서 수요는 가격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이다.

오답 포인트

A재의 판매수입 감소만 보고 '탄력적'을 '완전 탄력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첫 번째 함정이다. 또한 C재의 판매수입 증가율 5%를 수요량 변화율로 그대로 읽으면 안 된다. 판매수입은 가격과 수요량의 곱이므로 가격 상승 효과를 분리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가격 상승 문제에서는 먼저 판매수입의 방향을 본다. 판매수입 감소·불변·증가는 각각 탄력적·단위탄력적·비탄력적 수요에 대응한다. 판매수입 증가율이 가격상승률과 같으면 수요량이 일정하므로 완전 비탄력적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가격 상승 시 총수입은 탄력적이면 감소, 단위탄력적이면 불변, 비탄력적이면 증가한다. 가격과 총수입이 같은 비율로 오르면 수요량은 불변이다.

NoteBase

문 17.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 중 옳은 것은? (단,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의 합이다.)

<사례>
갑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월세는 200만 원, 종업원의 월급은 200만 원, 재료비 등 기타 비용은 월 300만 원이다. 갑이 다른 음식점에 취업하였을 경우 월 400만 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갑의 가게 월수입은 1,500만 원이다.
<보기>
㉠ 밑줄 친 내용은 매몰비용에 해당한다.
㉡ 갑의 기회비용을 고려한 이윤은 200만 원이다.
㉢ 갑은 음식점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갑이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의 기회비용은 1,100만 원이다.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합하여 기회비용을 구하고, 수입에서 기회비용을 뺀 경제적 이윤으로 영업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명시적 비용: 월세 200만 원 + 종업원 월급 200만 원 + 기타 비용 300만 원 = 700만 원
암묵적 비용: 다른 음식점에 취업하면 받을 수 있는 임금 400만 원
월수입: 1,500만 원
구해야 할 값: 기회비용과 경제적 이윤

사용할 공식

기회비용=명시적 비용+암묵적 비용
경제적 이윤=총수입-기회비용
다른 음식점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은 현재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포기한 소득이므로 암묵적 비용에 포함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명시적 비용은 200만 원 + 200만 원 + 300만 원 = 700만 원이다.
2. 포기한 임금 400만 원은 암묵적 비용이다.
3. 기회비용은 700만 원 + 400만 원 = 1,100만 원이다.
4. 경제적 이윤은 1,500만 원 - 1,100만 원 = 400만 원이다. 경제적 이윤이 양수이므로 음식점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과 ㉡이 모두 틀렸다. '월 400만 원의 임금은 매몰비용이다'라는 표현은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현재 영업을 위해 포기한 암묵적 비용이다. 또한 기회비용을 고려한 이윤은 200만 원이 아니라 400만 원이다. 옳은 조합은 ㉢, ㉣이다.
② X — ㉢은 맞지만 ㉠이 틀렸다. 포기한 월 400만 원의 임금은 이미 지출하여 회수할 수 없는 매몰비용이 아니라 암묵적 비용이다. 올바른 조합은 ㉢, ㉣이다.
③ X — ㉢은 맞지만 ㉡이 틀렸다. 경제적 이윤은 1,500만 원 - 1,100만 원 = 400만 원이므로 '200만 원'은 '400만 원'으로 고쳐야 한다. 올바른 조합은 ㉢, ㉣이다.
④ O — ㉢과 ㉣이 모두 맞다. 기회비용은 1,100만 원이고 경제적 이윤은 400만 원으로 양수이므로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오답 포인트

밑줄 친 400만 원을 매몰비용으로 오인하거나, 명시적 비용 700만 원과 암묵적 비용 400만 원을 모두 반영하지 않는 것이 함정이다. 포기한 대안의 소득은 암묵적 비용이고, 회수할 수 없는 과거의 지출만 매몰비용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실제로 지출한 명시적 비용을 합산하고, 포기한 최선의 대안 소득을 암묵적 비용으로 더한다. 그 기회비용을 총수입에서 빼서 경제적 이윤의 부호로 선택의 합리성을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기회비용 = 명시적 비용 + 암묵적 비용, 경제적 이윤 = 총수입 - 기회비용이다. 포기한 임금은 암묵적 비용이고 매몰비용이 아니다.

NoteBase

문 18. 다음 표는 갑국과 을국이 노동 1단위를 투입하여 생산할 수 있는 의자와 책상의 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필요 생산 요소는 노동뿐이고, 양국이 보유한 노동의 양은 같다.)

국가 \ 재화	의자	책상
갑국	5개	5개
을국	4개	2개

① 갑국은 의자 생산에, 을국은 책상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

② 책상 1개를 더 생산할 때 포기해야 하는 의자는 갑국이 을국보다 크다.

③ 을국에서 의자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책상 2개이다.

④ 양국이 비교 우위 재화를 특화하여 무역을 할 때, 양국의 특화 상품 1개 소비의 기회비용은 무역 이전보다 커진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노동 1단위당 생산량으로 각 재화의 기회비용을 구해 비교 우위를 판별하고, 무역 후 특화 상품을 직접 소비할 때 포기하는 수입품의 양을 교역조건과 연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갑국: 노동 1단위로 의자 5개 또는 책상 5개를 생산한다. 따라서 의자 1개의 기회비용은 책상 1개이고, 책상 1개의 기회비용은 의자 1개이다.
을국: 노동 1단위로 의자 4개 또는 책상 2개를 생산한다. 따라서 의자 1개의 기회비용은 책상 $\frac{1}{2}$개이고, 책상 1개의 기회비용은 의자 2개이다.

사용할 공식

재화 X 1개의 기회비용은 같은 노동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재화 Y의 수량을 재화 X의 수량으로 나눈 값이다.
X 1개의 기회비용=Y의 생산량X의 생산량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가 그 재화에 비교 우위를 가진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의자 1개의 기회비용은 갑국이 책상 1개, 을국이 책상 $\frac{1}{2}$개이므로 을국이 의자에 비교 우위를 가진다.
2. 책상 1개의 기회비용은 갑국이 의자 1개, 을국이 의자 2개이므로 갑국이 책상에 비교 우위를 가진다.
3. 책상 1개의 교환 대가를 의자 t개라고 하면 양국 모두 무역의 이익을 얻는 교역조건은 $1 < t < 2$이다. 갑국이 특화 상품인 책상 1개를 소비하면 의자 t개를 수입할 기회를 포기하므로 그 기회비용은 무역 전의 의자 1개보다 커진다. 을국이 특화 상품인 의자 1개를 소비하면 책상 $\frac{1}{t}$개를 수입할 기회를 포기하며, $t < 2$이므로 $\frac{1}{t} > \frac{1}{2}$이다. 따라서 을국에서도 그 기회비용이 무역 전보다 커진다.

선지 판단

① X — 갑국은 책상 1개의 기회비용이 의자 1개로 을국의 의자 2개보다 낮으므로 책상에 비교 우위가 있다. 을국은 의자 1개의 기회비용이 책상 $\frac{1}{2}$개로 갑국의 책상 1개보다 낮으므로 의자에 비교 우위가 있다. 틀린 표현인 '갑국은 의자, 을국은 책상'은 '갑국은 책상, 을국은 의자'로 고쳐야 한다.
② X — 책상 1개를 더 생산할 때 포기하는 의자는 갑국 1개, 을국 2개이므로 갑국이 아니라 을국이 더 크다.
③ X — 을국에서 의자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책상 2개가 아니라 책상 $\frac{1}{2}$개이다. 책상 2개는 의자 1개가 아니라 의자 4개의 생산량이다.
④ O — 비교 우위에 따라 갑국은 책상, 을국은 의자에 특화한다. 교역조건이 $1 < t < 2$일 때 갑국의 책상 1개 소비 기회비용은 의자 t개로 1개보다 크고, 을국의 의자 1개 소비 기회비용은 책상 $\frac{1}{t}$개로 $\frac{1}{2}$개보다 크다. 따라서 양국 모두 특화 상품 1개 소비의 기회비용이 무역 전보다 커진다.

오답 포인트

①은 생산량이 많은 재화를 곧바로 비교 우위 재화로 판단하게 만드는 함정이다. 비교 우위는 생산량 자체가 아니라 기회비용을 국가 간에 비교한다. ③은 을국의 '책상 1개당 의자 2개'와 '의자 1개당 책상 $\frac{1}{2}$개'를 거꾸로 바꾼 선지이다. ④에서는 무역 후 특화 상품을 소비하면 그 상품을 수출하여 얻을 수 있었던 수입품을 포기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각 국가에서 두 재화의 기회비용을 서로 역수 관계로 계산한 뒤, 같은 재화의 기회비용을 국가 간에 비교한다. 무역 후 특화 상품 소비의 기회비용은 국내 생산비가 아니라 그 상품을 수출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상대 재화의 양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비교 우위는 낮은 기회비용, 특화 상품의 국내 소비는 포기한 수입 기회로 계산한다.

NoteBase

문 19. 다음은 A국과 B국의 경제 안정화 정책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A국: 국공채를 매입하고,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였다.
B국: 종합 소득세를 인하하고, 정부 지출을 늘렸다.
<보기>
㉠ A국은 긴축 통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 B국은 긴축 재정 정책을 시행하였다.
㉢ A국과 B국은 모두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 A국과 B국은 모두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국공채 매입·지급 준비율 인하가 확장 통화 정책이고, 소득세 인하·정부 지출 확대가 확장 재정 정책임을 구별하여 옳지 않은 진술의 수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확장 통화 정책은 통화량을 늘리고 금리를 낮추어 총수요와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이다. 중앙은행의 국공채 매입과 지급 준비율 인하가 이에 해당한다.
확장 재정 정책은 정부가 지출을 늘리거나 조세를 줄여 총수요와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이다. 소득세 인하와 정부 지출 확대가 이에 해당한다.
긴축 정책은 이와 반대로 총수요를 줄여 과열된 경기와 물가상승 압력을 억제하는 정책이다.

NoteBase

보기 판단

㉠ X — 국공채 매입과 지급 준비율 인하는 통화량을 늘리는 확장 통화 정책이다. 틀린 표현은 '긴축 통화 정책'이며, 올바르게는 '확장 통화 정책'이다.
㉡ X — 종합 소득세 인하와 정부 지출 확대는 총수요를 늘리는 확장 재정 정책이다. 틀린 표현은 '긴축 재정 정책'이며, 올바르게는 '확장 재정 정책'이다.
㉢ O — A국과 B국은 모두 총수요를 늘려 경기를 활성화하는 확장 정책을 시행하였다.
㉣ X — 두 나라의 정책은 물가상승 억제가 아니라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확장 정책이다. 틀린 표현은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이며, 올바르게는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이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 ㉡, ㉣의 3개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옳지 않은 보기는 1개가 아니라 3개이다. '1개'는 '3개'로 고쳐야 한다.
② X — 옳지 않은 보기는 2개가 아니라 3개이다. '2개'는 '3개'로 고쳐야 한다.
③ O — 옳지 않은 보기는 ㉠, ㉡, ㉣의 3개이므로 맞다.
④ X — 옳지 않은 보기는 4개가 아니라 3개이다. ㉢은 옳으므로 '4개'는 '3개'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매입하면 시중 자금을 흡수한다고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매입은 대금을 시중에 지급하여 통화량을 늘린다. 또한 감세와 정부 지출 확대는 모두 총수요를 늘리는 확장 재정 정책이므로 긴축 정책과 방향이 반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통화 정책은 국공채 매입·매각과 지급 준비율의 방향을 확인한다. 국공채 매입 또는 지급 준비율 인하는 확장, 국공채 매각 또는 지급 준비율 인상은 긴축이다. 재정 정책은 감세·정부 지출 확대이면 확장, 증세·정부 지출 축소이면 긴축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매입·지준율 인하·감세·정부 지출 확대는 모두 경기 확장 방향이다.

NoteBase

문 20. 다음 중 국제 수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상 수지 적자는 대외 채무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원금 및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킨다.

② 환율의 하락은 수출을 증가시키고 수입은 감소시키며, 경상 수지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③ 우리나라가 태풍 피해를 입은 타국에 구호금 3,000만 달러를 원조한 것은 이전 소득 수지이다.

④ 본원 소득 수지는 임금이나 투자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외화의 수취와 지급의 차이를 보여준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환율 변동이 수출·수입과 경상 수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경상 수지의 세부 항목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경상 수지는 상품·서비스 거래와 본원 소득 및 이전 소득의 수취·지급을 종합한 것이다. 원/달러 환율의 하락은 원화 가치의 상승을 뜻하므로 일반적으로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을 낮추고 수입품을 상대적으로 싸게 만들어 경상 수지 악화 요인이 된다. 본원 소득 수지는 노동과 자본을 제공한 대가인 임금·투자 소득을, 이전 소득 수지는 반대급부 없이 주고받는 원조·송금 등을 기록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경상 수지 적자가 지속되어 해외 자금으로 보전되면 대외 채무가 누적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진다.
② X — 틀린 부분은 '환율의 하락은 수출을 증가시키고 수입은 감소시키며, 경상 수지를 개선한다'는 표현이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원화 가치가 상승하여 일반적으로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하므로 경상 수지는 악화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③ O — 재화나 용역의 대가 없이 외국에 제공한 구호금은 일방적 이전이므로 이전 소득 수지에 기록한다.
④ O — 본원 소득 수지는 임금과 같은 피용자 보수 및 이자·배당 등 투자 소득의 대외 수취와 지급의 차이를 나타낸다.

오답 포인트

②는 '환율 하락'을 통화 가치 하락으로 오해하게 만든다. 원/달러 환율 하락은 달러의 원화 가격이 내려간 것이므로 원화 가치 상승이며, 수출 감소·수입 증가 쪽으로 작용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환율의 표시 방식을 확인한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원화 가치 상승으로 바꾸어 읽고, 이어서 수출 감소·수입 증가·경상 수지 악화의 방향을 판단한다. 소득 수지는 대가가 있으면 본원 소득, 반대급부 없는 이전이면 이전 소득으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원/달러 환율 하락은 원화 강세, 수출 감소·수입 증가이다. 임금·이자·배당은 본원 소득, 구호금·송금은 이전 소득이다.

NoteBase